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후속 대책 논의

유성엽 위원장, 오찬간담회 가져... 의대 정원 49명 전북 존치 큰틀 합의·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설치 제안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12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서남대학교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 논의됐다.

유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된 만큼 서남대학교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학교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월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서남대학교 문제는 전북 최대 현안이고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남북고위급 회담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정부가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기원하는 희망 메세지로 가득차 있다.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화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서남대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사후대책 또한 지역내 분열을 야기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의대정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

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 설립 계획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2월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농업농촌 공익가치 헌법반영' 건의안

양성빈 도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사진)이 10일, 전라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농업을 돈 안 되는 1차 산업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되어 왔다"며, "농업 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공동체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농촌이 여러 측면에서 공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한민국헌법에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여 농민의 소득보장, 농업의 보전과 육성 등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23조, 제123조 등에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 농업보호 육성 등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헌을 통해 농업을 일 반산업과 같이 시장경쟁체제하에 두기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공공재로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라북도도회의 승인을 얻어 청와대,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최경환 "큰 사고 나기 전에 시동해야"

통합 반대파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최근 통합 추진 과정을 버스에 비유하며 "큰 사고 나기 전에 시동을 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처지가 곤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정작 통합버스에 시동을 걸었지만 약속한 동승 파트너는 올라탈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내가 가는 곳이 가 아할 길이라 약속하고 아니면 타던 버스 계속 타고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오늘 두 분이 탑승을 거절했다. 또 다른 탑승 거절자도 대기하고 있다. 시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시동을 건 통합버스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핸들을 잡은 손은 좌우 방향을 잃고 액셀을 밟고 있는 다리는 발을 들지 않는다. 엔진은 공회전 타이머도 발병을 부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천정배, "유승민의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됐다"

"안철수, 결국 유승민의 냉전적 안보관에 동조할 것"… "국민의당, '이기는 정당' 되어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안철수 길들이기 시작됐다"고 일침을 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민심·반개혁·반문재인 적폐연대를 총력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천 전 대표는 9일 오전 7시 40분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8일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 뿐 것은 사실상 안철수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 대표가 안보 위기 해법에 대한 생각이 같은 정당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만큼, 안 대표가 결국은 햇볕정책을 버리고 유 대표의 냉전적 안보관에 동조할 것"이라 내다봤다.

천 전 대표는 최근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바른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의견차이로 분열돼 나온 '새누리당'의 작은 집 내지 '자유한국당'의 아비타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없는 당이 된 만큼, 바른정당 사람들 대부분 그리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평하고, "유승민 대표는 1단계로 국민의당과 통합, 2단계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보수통합'을 완성코자 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합당 저지에 실패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개혁신당 창당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중요한 것은 '지지를 몇 % 올리는 것, 혹은 선거에서 될 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국민혁명 이후 민심이 바라는 개혁을 통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D비자금 허위제보'를 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 징계가 당연권 정지에 그친 것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

통령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내 최고위원이었다"고 지적하며 "그 당시에 그분도 언론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검찰에서도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덮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10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민심'따라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를 주도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약속 ▲민생 안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靑 "임종석·갈등, 한·UAE 관계 발전 방안 논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갈등 칼리파 알 무바리크 아랍 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정장은 9일 회동을 갖고 한국과 UAE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실장과 갈등 특사는 한국과 UAE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실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양측은 임실장과 갈등 특사의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기존 양국의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기재부총리와 경제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체들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갈등 특사는 에너지·전자 등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단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임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뉴시스